

# 홍장표 · 전강수, 「민주당 경제 · 민생정책의 비전과 과제」에 대한 토론

김상조(한성대 교수, 경제개혁연대 소장)

## 1. 대선 경제 · 민생 분야 공약에 대한 평가

□ “(진보 정치의 패배였으나) 진보적 정책노선은 승리”(발제문 5쪽)라는 평가에 의문: 오히려 2007년 대선 패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보의 위기로 보아야

- ‘경제민주화’와 ‘복지국가’ 의제의 상당부분은, 서구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, 원래 자유주의적 의제
  - 다만, 과거 한국 보수진영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의제가 한국사회에서는 진보적 의제로서 역할을 했던 것
  - 그러나, 작년 두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, 한국의 보수진영이 상당한 정도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고, 그 결과 ‘경제민주화’와 ‘복지국가’ 의제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
  - 박근혜 정부가 단순히 진보적 의제를 ‘선수치고, 베끼고, 몰타기’한 것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음
  
- 물론 박근혜 정부 5년간 한국 보수진영의 정상화 속도는 매우 더딜 것
  - 최근 ‘윤창중 사태’와 같은 굴곡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
  - 또한 최근 엔저 현상(아베노믹스)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공포 마케팅 예에서 보듯이, 보수진영의 정상화를 저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강화될 것
  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작년 두 차례의 선거를 경과하면서 한국사회 전반은 물론 한국의 보수진영 역시 결코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질적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
  - 이는 민주당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진영에 두 가지 위험으로 다가옴

□ 첫째, 기존 주장의 유효성 퇴조

- 과거 보수진영의 기형성을 전제로 형성되었던 진보진영의 정책대안들이 갖는 논리적 정합성 및 대중적 호소력이 크게 감소
  - 예컨대, ‘재벌총수도 불법행위 하면 예외 없이 감옥 간다.’는 간명한 원칙이 점차 힘을 얻어 간다면, 출총제 부활 · 순환출자 해소 · 금산분리 강화 등 기존의 재벌 소유구조 개혁 대책들은 반비례적으로 힘을 잃어갈 것
  - 물론 ‘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출발점’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나, 보수진영의 변화에 상응하는 진보적 정책 수단의 개발을 위한 치열

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

- ‘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은 짝퉁이다.’는 자기기만적 해석에 기초하여 과거의 주장을 관성적으로 되풀이한다면, 이는 진보진영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

□ 둘째, 새로운 진보적 가치의 여전한 모호성

- 형식적·절차적 차원을 넘어 내용적·실질적 민주화가 필요하며, 그 기초는 상생·협동의 공동체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필자들의 주장에는 의당 동의한다고 하더라도,
  -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,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찾기 어려움
  - 세계경제질서의 대전환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을 전제로 할 때, 그 답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
- 일국적 차원의 진보적 대안이 지속불가능의 근본적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 농후

## 2.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

□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 선택

- 단기·중기·장기의 time horizon 각각에 상응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, 이에 조응하는 정책수단 개발
  - 단기: 보수 정부 및 국회 하에서 민주당이 추구할 현실적 목표
  - 중기: 2016년 총선 및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제기할 비전
  - 장기: 20~30년 후에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적 가치

□ 중기적 관점에서 당의 리더십 확립 및 정책 역량 배가

-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차별화
- 당 지도부(특히 정조)의 정책적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
- 당 연구소의 자율성 및 연구 역량 강화